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

이 철 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인들은 다시 부시를 선택했다. 미국 제일주의와 애국주의에 휩싸여 있는 미국인들의 무지와 독선 탓에 인류는 4년 동안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부시가 집권한 지난 4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된 '잃어버린 4년'이었다 앞으로 4년 더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밀어닥칠 한파가 걱정이다. 북핵문제는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 이전으로 10년 이상 후퇴한 상태다.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쁘다. 부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제네바합의문의 폐기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찾아온 '잃어버린 4년'의 악몽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그는 대북 무력사용과 봉쇄정책 그리고 북한체제 붕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경정책에 끌려 다니다가는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미국 추종정책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의 결과다. 더 이상 미국의 선의와 처분에만 맡겨서는 북한핵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일단 관망해야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부시가 자세를 낮춘 것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에게 토론하자고 대든' 결과다. 노 대통령의 LA발언은 미국정부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넣을 수 있는 압력카드는 매우 한정적이다. 현재 한국은 한미관계에서 오히려 전술적 우위에 서 있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설을 흘려 안보 불안감을 이용하는 카드는 이미 효력이 소진되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도 마무리되고 2사단 감축을 200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까지 한 마당에, 다시 감축시기를 앞당기거나 감축규모를 늘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부대 연장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의 국회비준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미국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여론 주도층이나 젊은층, 언론과 접촉을 넓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부시가 이번에도 강경발언을 쏟아 냈다면 한국 내 반미 분위기는 크게 고조됐을 것이다. 한국정부도 북한과 접촉을 강화하고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은 고립되고 한미관계는 틀어질 것이다. 노 대통령의 LA발언대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 해법이 바뀌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부시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시 2기에 더욱 득세하게 될 네오콘

미국의 대북정책이 온건노선으로 돌아섰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목소리는 낮추어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이 네오콘을 중심으로 강경파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성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는 네오콘은 아니지만 강경노선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부장관에는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턴 차관의 승진이 유력시된다. 국무부 내의 온건파를 견제하기 위해 럼스펠드가 심어 놓았던 인물이다. 라이스 후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네오콘인 스티븐 해들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럼스펠드도 국방장관에 그대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온건파인 파월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은 모두 퇴진한다. 그나마 온건론을 펴왔던 국무부에서조차 협상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 안에 포진하게 될 이들 강경파들은 두 부류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북한붕괴론자들’ 이고 다



른 부류는 ‘북한위협론 활용자들’이다. 김정일 체제 교체나 북한 붕괴를 추구하는 일부 네오콘들의 생각은 북한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를 잘 모르는 순진한 구상이다. 북한 붕괴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고 북한 붕괴가 과연 미국에 이익인가를 고려할 때, 부시 2기의 공식정책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위협론’ 유지 필요

그 보다는 ‘북한위협론’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 정책과 중국 봉쇄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북한위협론’이 필요하다. ‘북한 핵의 위협’은

선제핵공격전략을 지탱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의 명분이 사라진다. 따라서 ‘강대국가 북한’, ‘테러 지원국 북한’, ‘WMD 확산의 주범인 북한’이 계속 있어야 한다. 부시 입장에서 북한은 ‘꽃놀이패’인 셈이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전략적·구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단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다. 1기 부시정부에서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온 것도 이런 이유다.

일단 6자회담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 강경파들이 6자회담을 몇 번 열어보고 북한과 협상이 안된다는 구실로 ‘6자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 상정을 추진하고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지 모른다.

또 다른 대북압박수단, 북한인권법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또 다른 카드는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이 꼬여 있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북미간의 대결을 고조시키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침해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인권법(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은 인권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을 유도·지원하는 ‘북한주민 탈북지원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인권

법안의 어디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인권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의도만이 엿보일 뿐이다.

사실 인권에 관한 한 미국은 별로 말할 자격이 없는 국가다.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포로 학대는 미국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9·11테러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애국법>은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국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가장 비협조적인 국가에 속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여 만든 인권규약들을 무시해 왔다. <유엔 여성차별금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의 1,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4개국 가운데 하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소말리아와 미국뿐이다. 북한난민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아직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미국 인권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래도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대량 탈북의 유도는 인권 개선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움츠리게 만들어 이제 막 시작한 북한의 개혁개방조치를 후퇴시킬 것이다. 게다가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추진해 되어

온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방해하고 파탄내자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꾸준히 햇볕을 쬐어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이제 막 저고리도 새 것으로 갈아입으려는 참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면, 나그네는 다시 외투를 찾아 입고 끈까지 바짝 동여맬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속도조절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정책변화 없이는 북핵 해결 어려워
북한 핵문제의 해법은 너무나 명확하다. 북한 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 지원을 동시에 맞바꾸면 된다. 미국이 정말로 핵확산 방지가 목적이라면, 북한에 보상을 해주고 북한핵을 '사버리면' 그만이다.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북한의 고민은 이런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핵 의혹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여 사찰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끊임 없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전제조건들을 제시할지 모른다. 즉 이라크의 경험은 북한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7년여 간에 걸쳐 대통령궁을 비롯해 전 국토를 이 잡듯이 뒤지는 철저한 무기사찰을 받고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

면서 이라크를 침략했다. 북한은 미국이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내세워 이라크에서와 똑같은 행동을 자신에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부시의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한반도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평화선언으로 돌파구 열어야

더 이상 한미공조 틀에 얽매어 미국의 강경정책에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1994년과 2000년의 비교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1994년 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미국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감돌았고 북핵협상에서 남한은 배제된 채 경수로 건설비용만 뒤집어썼다.

반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이 잡자, 미국도 이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사실상 수교를 약속하는 <북미공동고무니케>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부시의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한반도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약속하고 <남북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